

한국당 “국회정상화는 무효”… 재해추경 통과도 난항

국회, 80일만에 본회의 열렸지만 한국당 의총서 합의안 추진 불발 여야 공방에 ‘반쪽국회’ 여전할 듯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열린 제36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 의석이 비어있다. /연합뉴스

6월 임시국회 돌입으로 80일 만에 본회의가 열렸지만 여야 공방으로 국회 운영은 당분간 ‘반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 일부는 한국당의 강경 태세에 추가경정예산이 이달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교섭단체(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하지만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강원도 삼척시에서 일어난 북한 선박 접안 현장에 갔고, 논의는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는 앞서 문 의장

의 이 총리 시정연설 강행 의지에 대해 “지난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다른 파행 시도”라며 “국회를 중립과 균형의 원칙에 따라 운영해나가야

할 의장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국당은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와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회, 북한 목선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진상조사 등 현안을 제외한 일정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또 경제위탁회의 등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의 평행선 정국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실제 ‘반쪽 국회’ 운영은 추경 심사를 담당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이어질 모양이다. 민주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의원 불참으로 특별한 논의 없이 끝났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선별적 등원에 대해 “정쟁 도구될 회의만 참석한다”며 “편식은 건강에 해롭다”고 지적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에서 “공당은 국회에 부여된 모든 사안에 대해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자세를 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모든 사안을 공정정대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이형석 최고위원의 경우 “국회가 무슨 뷔페식당이나”며 “한국당이 할 일은 자신 입맛에 따른 ‘입맛 등원’이 아닌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살리는 조건 없는 등원임을 자각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다시 합의를 시도했고 3당 원내대표는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이후 한국당이 합의안 추진을 두고 내부 갈등을 겪으면서 불발됐다. 여야와 한국당 내 참여한 이견으로 6월 국회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진 의문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美 트럼프, 29·30일 韓 공식방문

4월 이후 80일만에 한미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1월 우리나라를 처음 방문한 모습. /청와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29일·30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고 말했다.

고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우리나라 방문은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 초청에 따른 것”이라며 “두 정상은 4월 정상회담 후 80일만에, 2017년 6월 첫 정상회담 후 2년만에 8번째 정상회담을 가진다”고도 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오는 30일 청와대에서 8번째 한미정상회담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한미동맹을 공고히 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만남 전인 오는 29일 오후 우리나라에 도착한다. 아울러 미국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문 관련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유추했다. 다만 청와대는 남북미 3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인 30일 오후 경기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미국으로 출발한다. /우승준 기자

“숭고한 희생치른 韓美… 평화로운 韓 만들 것”

文, 6·25 유공자 靑 초청 오찬 “美 워싱턴에 ‘추모의 벽’ 건립”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역대 정부 처음으로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위로연을 겸한 오찬을 가졌다. 오찬에는 ‘국군 참전유공자 141명’과 ‘유엔군 참전용사 재방한 사업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미군 및 교포 참전용사 37명’, 관련 유가족 182명이 참석했다. 오찬 주제는 ‘대한민국의 오늘을 있게 해주신 여러분께’다.

문 대통령은 오찬 때 “69년 전 22개국 195만명의 젊은이들이 전쟁이 발발한 대한민국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 미국이 있었다. 가장 많은 장병이 참전했고, 가장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정부는 그 숭고한 희생을 기려 워싱턴 한국 참전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을 건립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동맹의 위대함을 기억하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항구적 평화의 길을 함께 열어가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에서 ‘수출세계 6위’, ‘국민소득 3만불’을 넘는 경제강국으로 발전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전쟁과 질병,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군-유엔군 참전유공자초청 오찬을 진행한 모습. /연합뉴스

저개발과 가난의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는 원조공여국이 됐다”며 “대한민국은 유엔(국제연합)의 깃발 아래 함께했던 195만 영웅들의 헌신을 변함없이 기억할 것”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내년은 6.25 7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1953년 7월 27일 전쟁의 포연은 가셨지만 아직 완전한 종전은 이뤄지지 않았다. 두 번 다시 전쟁 걱정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게 국내외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번 오찬 행사에서는 아름다운 전쟁영웅들이 소개되기도 했다. 6·25전쟁 때 프랑스대대에 배속돼 화살머

리전투에 참전한 박동하 선생(94세)은 ‘아직 돌아오지 못한 나의 전우들에게’를 낭독했고, 캠프 에이시아(부산 용문 초등학교·13세)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주제로 ‘평범한 우리 이웃들이 6·25전쟁에 참전한 얘기’를 현장감 있게 전달했다. 캠프 에이시아는 캐나다인과 한국인 부모 사이에 태어났고, ‘꼬마 보훈 외교관’으로 유엔참전용사들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로 초청된 참전유공자들에게 대통령 서명 시계와 건강식품을 선물, 한분 한분 참전용사 이름을 새긴 카드를 동봉해 ‘오늘의 평화를 있게 한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

국회 파행에… ‘유치원 3법’ 법사위 회부

패스트 트랙 지정에도 논의 못해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이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3법 교육위 처리 불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간다. 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지만, 국회 파행으로 상임위원회에선 제대로 된 논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과 같은 당 간사 임재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이 내일 법사위로 회부된다”며 “교육위에 주어졌던 180일 이내에 (법안을) 처리하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특히 학부모님과 학생에게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유치원 3법은 역대 두 번째 신속처리 지정안이다. 패스트 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

장 90일 논의한 뒤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들은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안으로 지정된 뒤에도 여러 차례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한국당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처리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당 지도부와 법사위원 등을 향해 “하루 빨리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석대성 기자

공공임대주택 ‘아동빈곤가구’ 우선 입주

정부-국회, 주거지원 법안 발의

정부와 국회가 아동빈곤가구 주거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정부는 아동빈곤가구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을, 국회는 주거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아동빈곤가구를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1일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성장기 아동의 주거 여건 개

선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알린 바 있다.

실제 아동의 주거 여건은 정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도 조직 내 인간정주위원회 연구에 따라 1990년대 ‘유엔 아동권 협약’을 비준했다. 당시 유엔 인간정주위원회는 열악한 주거환경은 아동의 놀이·학습 능력·성장에 장애를 준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은 아동 주거 관련 국가의 의무에 대해 여전히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스마크워커펀에서 열린 ‘취약계층 주거지원 간담회’에서 현장 전문가와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은 94만명에 이르렀다. /석대성 기자